경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내사 종결

"민원 제기자 범죄 혐의 발견 안돼"

심리부검 결과 "신체적·심리적 고통 복합적으로 작용"
3개월간 통화·문자 47건… 항의성 민원제기 5건 인정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경찰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A교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7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A교사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과중된 학교 업무에 시달렸으며 건강악화 등으로 심리적 취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 속 담임을 맡은 학생의 누나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두통과 불면증,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추정됐다.

경찰은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 B씨가 A교사에게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B씨 등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유가족과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노트북, 업무용PC, 업무 수첩, 메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간호학과 교수와 변호사, 전직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교사와 B씨는 3월부터 A교사가 사망(5월 22일)하기 직전까지 총 47건의 연락을 취했다. 문자와 통화, 부재중 전화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항의성 민원 제기로 인정한 내역은 A교사가 사망하기 일주일가량 전인 5월 16일 오후 8시 이후 이뤄진 통화 4건과 18일 통화 1건이 전부다. B씨는 A교사에게 "학생에게 폭언을 했으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46분쯤 유서를 남기고 제주시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B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 특별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 다음날인 2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토평동 야적장 한밤 중 화재

폐목재 등 불에 타며 소방 화재 진압 장시간 소요

서귀포시 토평동 한 에너지업체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시간여 만에 초진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7분쯤 토평동 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공업단지 내 야적장에서 시작됐다. 야적장 내부에 폐목재가 다량으로 적재돼 있어 불이 인근 건물로 확대되며 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건물 4개동, 연면적 1082㎡까지 확산됐다.

소방은 화재 진압을 위해 지난 1일 오후 9시4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154명과 장비 32대 등이 투입됐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가 난 야적장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식 결과 화재는 자연발화로 추정됐으며 피해 면적은 이번 화재와 같은 4개동, 1082㎡가량이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밝혀라"

도내 교원단체, 책임자 엄벌 촉구 성명
'혐의 없음' 경찰 내사 결과에도 유감 표명

경찰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도내 교원 단체들이 유감 표명과 함께 도교육청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좁은 시각의 결과"라면서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는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의 부속 절차가 아닌,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현장 안착 점검, 유족 요구안 수용 및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화 상대 인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 순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사업 보조금 떼먹고 부실공사 '철퇴'

해경, 고내항 공사 건설업체 대표 등 8명 송치
30억원대 편취… 방파제 침하돼 주민 민원 제기

해양수산부 사업의 보조금 30억원가량을 편취하고 불법 하도급을 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보조금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의 원도급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와 감리 C씨 등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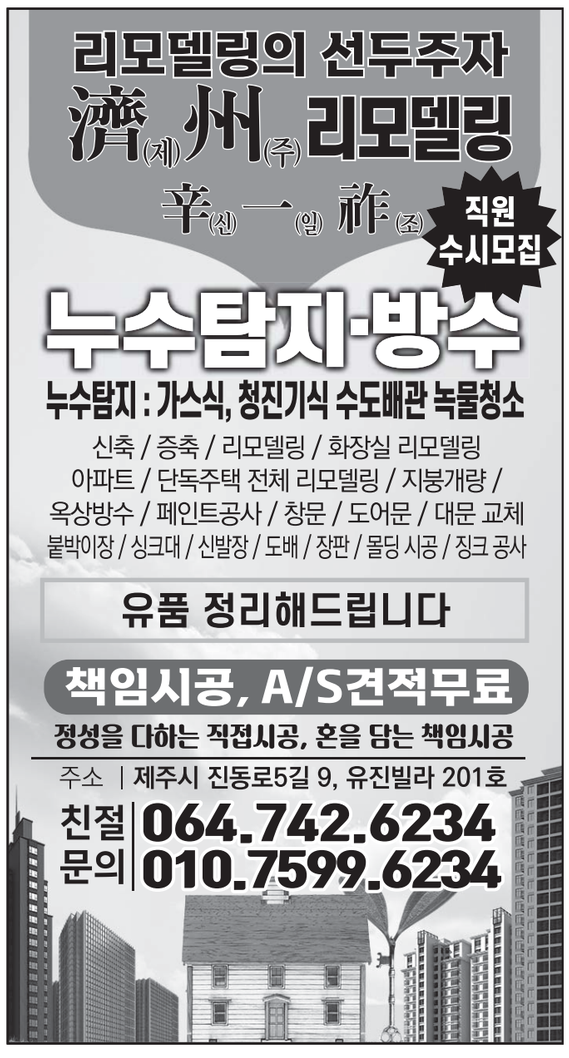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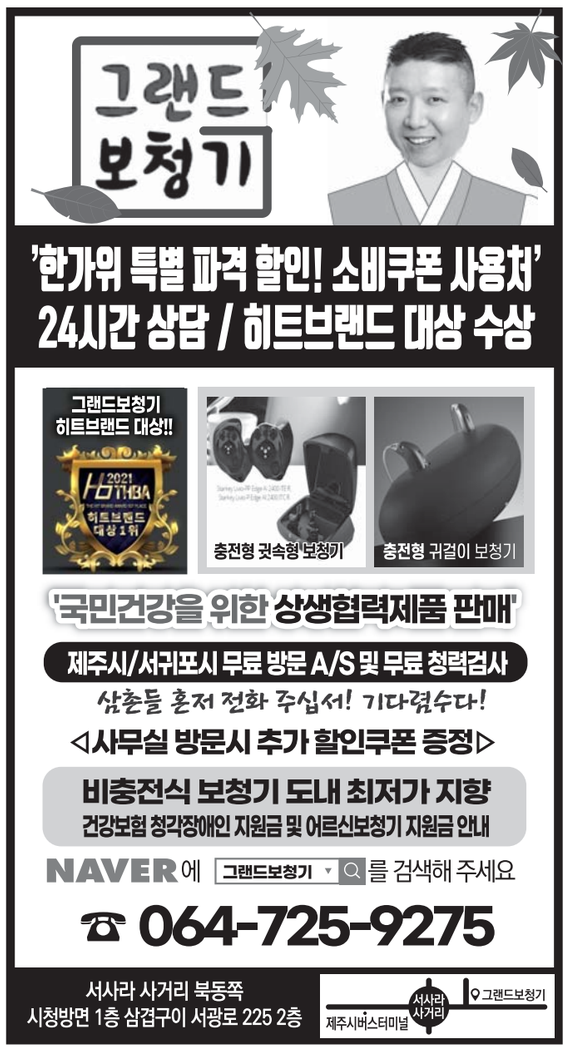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 성장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고내항 조성사업의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 중 30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하청 대표 B씨로부터 대가금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부실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면서 기울어진 고내항 방파제. 제주해경 제공

B씨는 하도급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업체 내 특정 자격증 소유 인원을 채우고자 자격증 소유자 3명을 직원으로 속이고, 불법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내항 방파제는 준공(2023년 8월)된 이후 몇 달 만에 방파제 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사업 시방서와 달리 지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중 모래 위에 방파제가 설치돼 지반 침하가 진행됐고 방파제 일부는 아예 절단됐다.

이처럼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감리 C씨는 감독을 소홀히 했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양유리기자